

## 2018년 임금전망 포커스

성재민\*

2017년 당초 기대를 넘어선 3.1%의 경제성장에도 명목임금상승률은 크게 둔화해 2016년 대비 2.7% 증가에 그쳤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확대되면서 실질임금상승률은 0.8% 증가해 2011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2017년 명목임금상승률 둔화에는 정액급여의 안정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특별급여 감소와 초과급여 둔화가 작용하였다.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임금인상률이 낮았는데, 이는 2016년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높아 임금상승을 견인했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관련 산업과 건설업의 특별급여가 기저효과로 2017년에는 상승폭이 낮아진 것과 일부 대규모 사업체의 교섭지연 영향을 받은 탓이다.

한편 2017년은 상용직(2.3%)의 임금상승보다는 비상용직(4.8%)의 임금상승이 더 컸으며, 비상용직의 임금상승률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상용직 대비 비상용직 상대임금격차가 2017년 65.5%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의 경제성장은 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16.4% 인상)은 임금상승률을 예년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일부 한계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월급 인상폭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조정하기도 하지만,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폭 만큼은 아니더라도 저임금 부문에서 예년을 훨씬 상회하는 월급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를 줄여 임금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올해 연구원은 2017년보다 1.1%p 높은 3.8%의 임금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중 무역마찰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현실화될 경우 이보다 낮은 임금상승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월급여 인상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와 정부의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얼마나 임금인상을 귀결되는지에 따라, 그리고 지난 해 대규모 사업체 특별급여 인상폭이 낮았던 기저효과 등 특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seongjm@kli.re.kr).

이요인도 작용해 올해 임금인상률은 전망보다 다소 높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호는 임금전망 원고 외에도 공공부문 임금체계 관련 해외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독일, 일본, 영국의 공공부문 임금체계 사례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각 국간 차이를 비교정리하고, 우리나라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임금체계의 변화는 특성상 충분한 논의와 깊은 고민을 통한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임금체계는 직무특성보다는 호봉에 따라 결정되거나, 정부주도로 일사천리로 도입된 천편일률적 성과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변화의 필요는 크나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독일, 영국 사례는 임금체계 변화를 위해 수년간의 교섭이 전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 노사가 서로의 유불리를 떠나 긴 호흡으로 노사협치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KLI**